
정책참고자료

2019-1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

- 일반국민 대상으로 노선조사에 직접참여하는 '국민참여조사단' 모집 -

4

2 국민권익위원회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

- 2만 6천명의 국민 참여로 모바일 상품권 사용의 불공정 개선 -

9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신규인력 1:1 직무코칭 및 인건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 신규 인력매칭, 전문가 현장 직무코칭(최대 12회, 회당 50만원), 구직자 인건비(월 60만원) 등 지원 -

19

4 교육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2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을 통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구현

-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 낙동강 녹조제어 실증연구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26

6 문화체육관광부

삶의 지혜를 찾는 '도서관 지혜학교' 시범 운영

- 8월 말부터 국립대학교와 협력, 9개 도서관에서 인문학 심화과정 운영 -

32

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37

8 환경부

환경부,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 수입량이 많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높여 폐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감축 -

41

9 고용노동부

산재노동자 재취업 대폭 증가

- 상반기 직업복귀율 전년대비 3.45%p 상승 -

————— 45

10 여성가족부

“유아 발달지연, 휴대전화로 조기 관리한다.”

-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 49

11 국토교통부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에어컨·히터) 추가 지원

- 국토부, 추경예산 12억 원 확보...화물차 1,500대에 장착 가능 -

————— 56

12 해양수산부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 해수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마련배포 -

————— 62

「DMZ 평화의 길」 국민과 함께 만든다

- 일반국민 대상으로 노선조사에 직접참여하는 ‘국민참여조사단’ 모집 -

- 정부는 남북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 문체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의 동서횡단구간 노선조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고 밝혔다.

*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DMZ 평화의 길’은 DMZ 인근의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도보여행길 500여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이후 고성(4월), 철원(6월), 파주(8월) 3개 구간을 개방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3개 기관은 DMZ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세계적인 도보여행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10개 지자체 구간별 10명, 총 100명 선발

-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은 도보여행길의 안전성, 매력성, 특수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형식으로 발굴하는 등 노선 설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국민참여조사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교통비만 제공되며, 구간별(시·군별) 인접 지역 주민과 국내·외 도보여행길 완주경험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모집기간) 8.21.~9.1.(12일간), (방법) 행안부 ‘다엎지기’,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리’를 통해 공개 모집

- 국민참여조사단은 DMZ 평화의 길 후보 노선을 직접 걸어보며 길의 장·단점, 위험·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을 기록하게 된다.

※ 14개 쟁점구간을 대상으로 공동조사(1일) 및 구간별 조사(1일) 참여

- 또한, 국민참여조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추진과정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DMZ 평화의 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

- 향후, 국민참여조사단 의견이 반영된 노선(안)은 도보여행, 생태환경, 문화·관광, 디자인·홍보, 지역개발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DMZ 평화의 길 국민디자인단*’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노선을 결정한다.

* 위원장(지방자치분권실장) 등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8), 민간위원(12) 총 20명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반국민과 도보여행동호인들이 직접 길을 걸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길이 가지고 있는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그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도보여행길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 모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3개 기관 협업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 조성을 위한 노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조사에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도보여행길로서 안전성, 매력성, 특수성 등을 직접 현장에서 발굴하기 위해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을 선발하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접경지역을 가로지르는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 조성 추진에 관심 있으신 국민 여러분과 도보여행동호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① 모집대상 : 10개 시·군, 10개 구간

- (노선조사) 개인별 1일, 1개 시·군 10~20km 도보 조사(2~5시간)
- (발대식) '19.9.19.(잠정) 공식 발대식 및 파주구간 공동조사 필수참석(전원)

권역	시·군	구간 (거리, km)	지역별 선발인원	조사 참여기간	구간별 참여인원
계	10개 시·군	10개 구간 (812.2)	100	10일	
발대식 및 공동조사	파주시	동패동~두지리 (94.0)	10	1일	100 (참여자 전원)
서부	강화군	교동제비집~강화대교 (31.0)	10	1일	10
	김포시	강화대교~일산대교 (45.6)	10	1일	10
	고양시	행주대교~동패지하차도 (30.0)	10	1일	10
중부	연천군	장남교~고대산 (119.1)	10	1일	10
	철원군	백마고지역~말고개 (160.8)	10	1일	10
동부①	화천군	다목리~평화의담 (166.5)	10	1일	10
	양구군	백토마을~편치볼 야생화공원 (85.7)	10	1일	10
동부②	인제군	서화리 평촌교~진부령 (29.1)	10	1일	10
	고성군	진부령~송도진리 (50.4)	10	1일	10

※ 국민참여조사단 참여자 전원은 9월 19일 개최되는 발대식 및 공동조사 필수 참석, 시군별 현장 조사(1일) 참여(파주 구간은 공동조사 참여로 같음)

② 모집기간 : 2019. 8. 21.(수) ~ 2019. 9. 1.(일)

- 모집공고 : 행안부 ‘디엠지기’ 및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 모집
- 참여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jangung@korea.kr) 전송
※ 시군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9. 1(일) 24: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③ 모집인원 : 총 100명(시.군별 10명)

- 우대선발
 - ①국내·외 도보여행길* 완주경험자(도보여행동호인), ②발대식(9.19.) 참여 가능자, ③구간별 인접 지역주민 우선 선발
 - *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스페인 산티아고순례길 등
- 추천선발 : 총 모집인원 100명 초과시 1.2배 120명 범위내 추천 선발
※ 시·군별 10명 → 12명

④ 지원내용

-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는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조사단 운영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실비, 1인 5만원 한도)만 지급
※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시내 교통비(택시, 지하철)는 제외

⑤ 자격요건

< 일반요건 >

- 직접 도보로 현장조사가 가능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 민간인통제선, DMZ 출입을 위해 국방부, UN사 등 신원조사기관에 개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신원조회를 출입이 가능한 일반국민
- SNS(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하여 국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SNS 사용자 계정 등 경험 또는 실적 제출

< 도보여행동호인 우대 요건 >

- 국·내외 도보여행길 완주를 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예: 완주증 사본)

6 선정방법

- 권역별 신청자 결격여부 확인 후 추천을 통해 SNS(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용 가능자 우선선발
- 중도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예비인원(1.2배) 포함 선발

7 발 표 : 2019. 9. 3.(목) / 디엠지기·두루누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김장웅 주무관(☎ 044-205-3514)

8 조사기간 : 2019. 9월중, 10개 시·군 구간별 1일

9 조사방법

- 최종 선발된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발대식(9.19.) 개최
 - 국민참여조사단 전원 대상 수도권 내 1개 구간(파주) 공동 조사 실시
 - DMZ 평화의 길에 대한 개요 설명 및 조사 구간에 대한 설명
 - 조사방식, 안전 및 보안교육, 향후 보고서 작성 등의 방법 설명

《 발대식 행사계획 》

- 행사일시 : '19. 9. 19(목) 09:30~17:30 ※예정(일정·시간·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행사장소 : 파주시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다목적홀, 임진강 생태탐방로
 - 참여인원 : 국민참여조사단 100여명
 - 조사단 중 희망자, 기자단(언론, sns)
 - 주요내용
 - 차관님 격려말씀
 - 안전교육, 임진강 생태탐방로 공동조사 등
- ※ 국방부,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사)경기생태관광협회 협조

- 권역별 또는 시군별로 수탄력적으로 노선조사 진행

10 유의사항

- 권역별 현장조사시 집결지까지 개별 이동 원칙, 점검결과 보고서는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DMZ 평화의 길 국민참여조사단 자원활동가 자격 취소
- 민통선, DMZ 구간 탐방시 국방부, UN사 등 신원조사기관 신원조회 미통과시 예비선발명단 후순위자 참여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

- 2만 6천명의 국민 참여로 모바일 상품권 사용의 불공정 개선 -

-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 6천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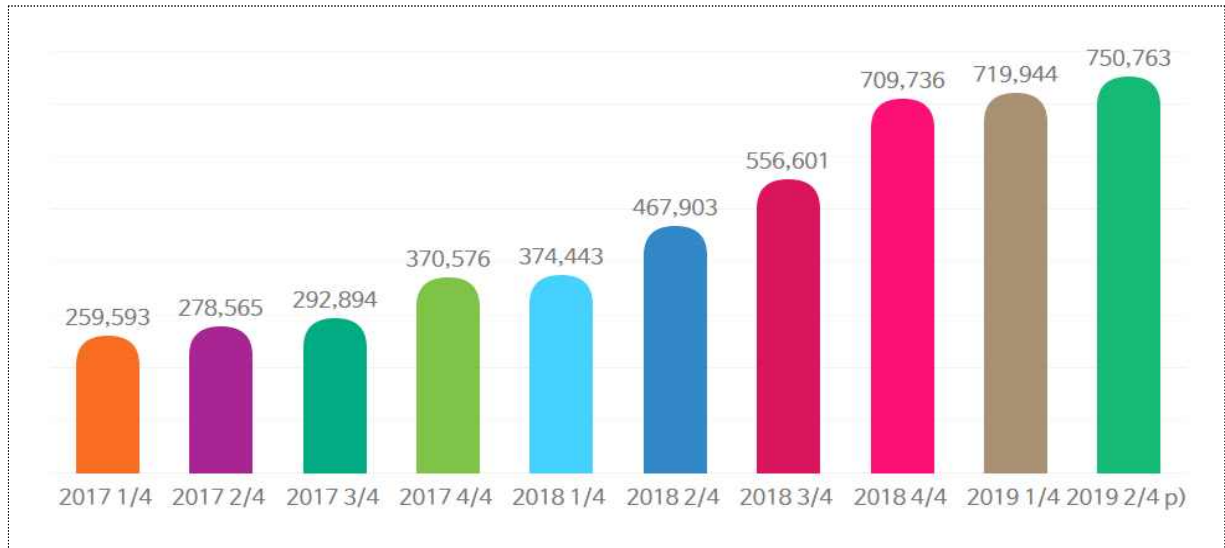
* 금액 및 물품 등이 기재된 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

-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 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 모바일 상품권(e쿠폰서비스) 분기별 거래액 >

(단위 : 백만 원)



(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 매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상품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국민생각함) >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프로모션, 이벤트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상 판매됐다면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영화나 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 ☐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붙임 1 >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붙임 2 > 모바일 상품권 현황

< 붙임 3 > 국민 설문조사 주요 내용

< 붙임 4 > 민원분석 결과

모바일 상품권

구매·선물부터 사용까지 편리하게

국민생각함·네이버 공동설문

국민 2만6천명 의견으로 바꿉니다!



유효기간 확대



3개월 → 1년

제각각인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

미사용시 90%환불 고지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고지



송은 돈을 찾아라

통지시점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미사용 잔액의 90% 환불 고지

국민 26,162명 의견 수렴

모바일 상품권



영화예매권
환불·연장 가능



추가대금요구
분쟁해결기준 마련



상품제공 불가능
100% 환불

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액 반환 상품권에 명시

- (정의) 금액 및 물품 등이 기재된 증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신유형 상품권*의 한 종류
* 모바일, 전자형(기프트카드), 온라인(PC) 등 종이형을 제외한 전자적 형태
- (규모)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17년 1조 2,016억 원에서 '18년 2조 1,08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
* '17년 1/4분기 2,595억 원 → '18년 1/4분기 3,744억 원 → '19년 1/4분기 7,199억 원
- (형태) 금액형,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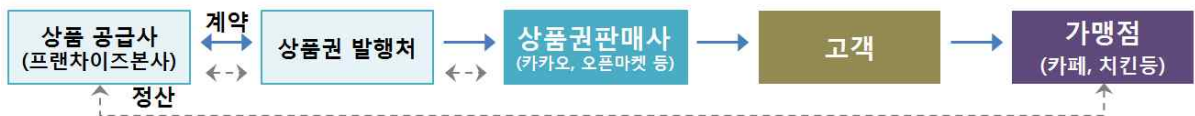
금액형	물품 제공형	용역 제공형
기재된 금액 범위 내에서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명시된 특정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명시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유형) 고객에 따라 B2C, B2B 상품권으로 구분

B2C 상품권 (기업·소비자간 거래)	· 개인이 구입, 소멸 시효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유효기간 연장 가능, 유효기간 내 연장하지 않을 시 90% 환불만 가능
B2B 상품권 (기업간 거래)	· 기업이 자사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목적으로 구매·제공,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본 30일이며, 연장 불가

- (유통) 고객이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교환 시 단계적으로 정산

< 모바일 상품권 유통구조 >



- (유효기간, 환불)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종류에 따라 환불도 곤란

구 분	종이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금액형	물품·용역형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유효기간 (연장)	없음 (시효 5년)	1년 (가능, 시효 5년)	3개월 (가능, 시효 5년)	통상 30일 (불가능)	7일~30일 (불가능)
잔액 반환	60% 이상 사용	60% 이상 사용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환 불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 영화예매권 관련 주요 판매사의 경우 영화예매권을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형태로 판매하여 환불·연장이 가능하게 운영

□ 설문조사(26,162명 참여)

- ▶ 설문주제(네이버 지식iN의 선택 24,324명, 국민생각함 1,838명, 각 2회)
 - (1차) '편리한 듯 불편한 모바일 상품권, 내 돈이 새고 있다?' ('19.5.1.~5.15.)
 - (2차) '새고 있는 내 돈 찾기 프로젝트, 모바일 상품권을 지켜라' ('19.6.24.~7.8.)
-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 NAVER 공동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 ▶ 응답연령 : 20·30세대가 54.8%로 과반수, 40대 22.9%, 50대 10.7%, 60대 이상 6.8%, 10대 4.8% 순(국민생각함 기준)
 - ※ 댓글 : 국민생각함 466건, 네이버 지식iN의 선택 702건



< 네이버 지식iN의 선택(24,324명) >

- (1차, 10,645명) “모바일 상품권을 쓰기 위해 필요치 않게 추가 구매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40.9%(4,357명)가 추가 구매 하지만 비용이 아깝다, 59.1%(6,288명)는 잔액을 포기한다고 응답
- (2차, 13,679명) “물품·용역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3개월”에 대해 71.1%(9,732명)가 유효기간이 짧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

< 국민생각함(1,838명, 1차 609명, 2차 1,229명) >

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1차)

- 유효기간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조치도 안함

-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는 90% 환불 가능을 75.2%가 모름
-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 모바일 상품권의 4년간('14년~'17년) 미청구액은 304억 원 이상으로 '19년에 소멸하는 액수만 94억원 에 달할 것으로 예상('18.9월, 과기부)
- 짧은 유효기간에 대해 연장 필요 의견 다수(금액형 66.7%, 물품형 89.4%)



②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안 되는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 이벤트 상품권이나 영화예매권은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다수(1차, 이벤트 상품권 49.8%, 영화예매권 68.5%)
- 이벤트 상품권 불편사항은 짧은 유효기간(70.9%), 기간연장 불가(49.8%), 환불 불가(42.2%) 순으로 조사(1차, 중복선택)
- 특히, 유상 구입한 이벤트 상품권과 영화예매권에 대해 기간 연장, 환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2차, 이벤트 상품권 91.7%, 영화예매권 89.0%)

③ 현금영수증 미발급, 불합리한 추가대금

- 응답자 중 현금영수증 거절 경험은 114명(18.7%), 수수료·배달료 등 추가요금을 요구받은 경우는 162명(26.6%)이 존재(1차)
-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 추가대금 요구 등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5%로 조사(2차)

붙임4

민원분석(1,014건, '16.1. ~ '19.6.) 결과

- 모바일 상품권은 사적 거래임에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16.1. ~ '19.6. 총 1,014건에 달함

※ 민원발생 추이 : ('16.) 264건 → ('17.) 294건 → ('18.) 289건 → ('19.6.) 167건

-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유효기간 및 잔액반환(31.3%), 약관 적용확대(38.5%), 현금영수증 및 추가금액(10.8%)이 전체 80.6% 차지

- ① (유효기간 및 잔액반환) ▲짧은 유효기간으로 사용 못하는 상품권 개선 요청, ▲해당 물건이 없어 다른 물건 구입시 잔액 미반환

-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아, 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요구했으나 '금액형'이 아닌 '물품형'이므로 기한 연장의 대상이 아니므로 90% 현금 환급만 가능하다고 함('17.5월, 공정거래위원회)
- 상품권에 명시된 물품이 없으면 소비자는 더 비싼 것으로 주문하고 차액을 지불하든지, 상품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해야 함.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고 공정한 상거래인지 의문스러움('19.2월, 공정거래위원회)

☞ 유효기간 연장 및 물품 부존재시 환불 표시·안내

- ② (약관 적용범위)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 구입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환불 불가, ▲영화예매권 기간 연장·환불 불가 부당

- 모바일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유효기간을 1달조차 주지 않았음. 그러다 유효기간이 지나 기간연장을 요청했으나 프로모션 상품이고 구매 후 유효기간 연장불가라는 이유를 적시했다는 이유로 거부함('19.1월, 한국소비자원)
-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을 못해도 90% 환불이 가능한데, 영화 관람권은 7일이 지나면 아예 사용을 못함. 환불 규정이 없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19.1월, 공정거래위원회)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범위 명확화

- ③ (현금영수증 및 추가금액)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부당한 추가금액 요구에 대한 개선 요청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장사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영수증 해달라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함. 사용 시 매장에서 해주는 것이 맞고 법적으로 의무 발행인데 발급 거부라고 얘기하니 아무튼 안 된다고 거절함('18.7월, 한국소비자원)
-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문하는데 배달료 6천원을 받음. 일반적으로 주문하면 안 받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시키는 경우에만 배달료를 받는다고 함('18.7월, 한국소비자원)

☞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 명시, 분쟁해결기준 강화

중소기업 신규인력 1:1 직무코칭 및 인건비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 신규 인력매칭, 전문가 현장 직무코칭(최대 12회, 회당 50만원),
구직자 인건비(월 60만원) 등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8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애로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직무능력을 갖춘 자가 없음(39.7%)’을 꼽았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25.3%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채용계획이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은 기술·기능직(61.3%) 채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2018, 중소기업중앙회)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규 인력의 숙련도를 신속히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구직자에게는 인력매칭, 전문가 1:1 현장 코칭 및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우선, 신규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매칭해 주고, 최대 3개월간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실습은 명장 등을 활용한 1:1 전문가 직무코칭(최대 12회, 회당 50만원)을 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습기간 중 인건비(최대 3개월, 월 60만원)를 지원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접수기간은 8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참여기업 및 구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구직자에게 직무교육(3일 이내)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개별 중소기업 현장에 특화된 1:1 코칭(최대 3개월) 후 채용 연계

○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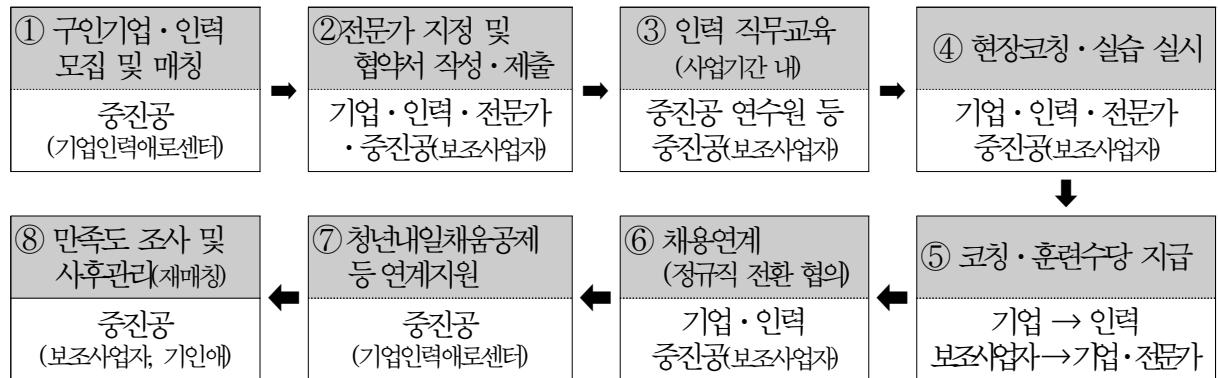
- (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구인애로 중소기업(100개사 내외)
 - * 현장코칭 후 정규직 전환 예정 기업(구직자) 우선 지원, 기업 당 최대 5명
 - **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 우선 지원
- (구직자) 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350명 내외)
 - *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구직자 제출) 등으로 증빙

○ 지원 내용

- (직무교육) 인력 당 집합교육(3일 이내) 1회
 - * 기업·인력이 중기연수원 등 교육과정 중 수요에 따라 사업기간 내 자율선택
-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최대 3개월, 예산소진시까지)
- (현장코칭) 기업 당 코칭비 1회 50만원(5시간/일, 최대 12회, 예산소진시까지)
- (취업연계) 실습기간 종료 후 실습자 정규직 전환 유도
 - *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자금(인건비 등) 융자 연계지원*

○ 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주관)

○ 지원 절차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 -

-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명), '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 '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

	'19년 2학기	'20년*	'21년~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 '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리며,”
 -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통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구현

-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 낙동강 녹조제어 실증연구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 장마가 끝난 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과학기술을 활용한 녹조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출연연이 힘을 모아 관심을 끌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8월 20일(화)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구축 실증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녹조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일시/장소 : 8.20(화) 13:30 ~ 15:00 / 낙동강 일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 구미)

□ 여름철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녹조는 강의 햇빛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이취 발생 등 국민의 식수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수 처리 선진화 기술개발연구*를 지원하여 정수처리제를 개발해 환경부와 협력하여 환경부 수처리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는 낙동강 수역을 대상으로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 (내용) ▲ 녹조 유래 맛냄새 물질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취수장 조류 제거 전처리 장치 개발, ▲ 기존 대비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정수처리제 개발

**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개발 및 구축연구」 '18~'21, 총 77.4억원

- 동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녹조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모니터링·예측부터 제어·관리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기술 개발을 목표로,
 - 녹조 사전발생 억제를 위한 수류확산장치, 녹조제어를 위한 녹조 제거선,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 반잠수정을 낙동강 일대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 연구진에 따르면, 낙동강에서 기존 연평균 30일 가량 발생하던 조류경보 일수를 10일 이내로 낮추어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출연연과 경상북도가 연구기획 단계부터 연구성과의 적용·확산까지 전주기적으로 협업하여 진행 중이며,
 - 경상북도에서는 4년간 25억원을 투입하여,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를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시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적용을 위해 낙동강 녹조문제해결지원센터 구축 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성과 확산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 낙동강 녹조제어 연구현장 방문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 시민 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과학기술 기반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자와 수요자 간 활발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으며,

○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연구 결과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과학기술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강조하며,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집·활용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낙동강 녹조제어 실증연구 현장방문에 이어 하천 보전·복원 기술개발을 위해 실규모 하천 실험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동하천실험센터(경북 안동시)도 방문하여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의중 사무관(☎ 044-202-46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개요

- (일시) '19. 8. 20(화) 13:30 ~ 16:20
- (장소) 낙동강 녹조제어 실증연구 현장*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 * 경북 구미시 낙동제방길 200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 간담회 후 안동하천실험센터 이동·방문 예정(경북 안동시 남후면 아곡길 942)
- (주요 참석자) ▲(부처) 과기정통부 제1차관, ▲(지자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구미시 부시장, ▲(전문가)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

□ 방문 내용

- 녹조 제어 실증연구 현장방문
 - 출연연(건기연, 과기연, 전자통신연 등)-경상북도 간 협업*을 통하여 추진 중인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구축」 현장방문 및 시찰
 - * 연구회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을 통해 추진(총 77.4억원) ⇨ 현장적용(경상북도, 25억원)

< 현장방문 시 주요 시연내용(안) >

- ① 녹조 사전발생 억제기술(수류확산장치 2기)
- ② 녹조 제어기술(녹조제거선)
- ③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USV 이동형 센서시스템)

- 녹조제어 등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간담회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과학기술(R&D)과 지역(非R&D) 간 연계·협력방안 등 모색
- 「안동하천실험센터」 현장방문
 - 하천 관련 복원·수리(hydraulic)·구조물 등 실증을 위해 실제 하천 규모(600m 길이 대형수로 3개)로 구축한 연구센터 현장방문 및 시찰

붙임2**낙동강 녹조제어 실증연구 현장방문 주요 참석자**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상철	구미시	부시장	
김석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경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병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희숙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위원	
노진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센터장	
서규태	창원대학교	교수	
이원태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송미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	
정문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이상협	한국연구재단	단장	
윤혜정	(주)KT	단장(전무)	
백명수	환경운동연합	소장	

붙임3 「낙동강 녹조제어 통합플랫폼 개발 및 구축연구」 개요

□ (사업내용) 지역특성 맞춤형 통합 녹조제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모니터링 기술 등 현장 실증

○ 발생오염원 관리 → 모니터링·예측 → 제어·관리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기술 개발

* 연구회 창의형 융합사업을 통해 추진('18~'21, 총 77.4억원) ⇨ 현장적용(경북, 25억원)

□ (규모/기간) 총 77.4억원 / 3년('18.11~'21.10) + 1년(현장적용)

기간	'18.11~'19.10 (1차년도)	'19.10~'20.10 (2차년도)	'20.10~'21.10 (3차년도)	'21.10~'22.10 (2단계)
실증내용	수상형 녹조제어기술 USV이동형 센서시스템 구축	육상형 녹조제어기술 IoT 센서 네트워크 구축	통합 녹조제어기술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녹조 제어 통합플랫폼 구축 * 지자체(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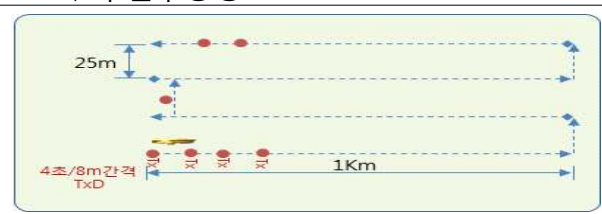
○ (실증지역) 낙동강 산호대교 상류 1 km 지점(경북 구미시 소재)



□ (실증기술) 녹조제거선(녹조제어기술), 수류확산장치(녹조사전발생억제기술), USV 이동형 센서시스템(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참고 :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USV* 이동형 센서시스템)

* USV : Unmanned Surface Vehicle, 무인수상정



광역 조밀형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자율주행방식(수동, 자동), 이동속도 ~7 knot)

삶의 지혜를 찾는 ‘도서관 지혜학교’ 시범 운영

- 8월 말부터 국립대학교와 협력, 9개 도서관에서 인문학 심화과정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 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회장 이재영, 서울대 인문대학장)와 함께 전국 9개 도서관에서 ‘도서관 지혜학교(이하 지혜학교)’를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고학력 은퇴 인력이 증가하고 질 높은 인문교양 학습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인문학을 강연, 체험, 탐방과 결합하여 인문학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지혜학교’는 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깊이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

‘지혜학교’에서는 ▲ 주체적으로 성찰하는 삶의 인문학, ▲ 삶을 바꾸는 실천의 인문학, ▲ 더불어 사는 공생의 인문학을 목표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심화·재구성하고, 이를 공동체적 삶의 지혜로 승화하는 ‘지혜로운 시민’을 키운다. 이를 위해 교육 방식도 지식 전달 위주의 강연 방식이 아닌, 깊이 있는 인문학 주제 강독과 쌍방향 토론, 연구 모임, 개인별 지도, 과제수행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지혜 입문, 체득, 구현 등,

단계별 인문학 프로그램을 3개월(12회) 동안 특화해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등 전국 6개 국립대학(인문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9개 국공립도서관이 힘을 더한다. 국립대학은 우수한 인문학 전문 인력과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서관은 교육 공간, 참여자 모집·관리 등 전반적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7일(월)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가 4개 도서관과 협력해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2막을 설계하다’(8. 26.~11. 18.)를, ▲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공존의 지혜: 닮음과 다름에서 배우기’(8. 29.~11. 28.)를, ▲ 강남도서관에서는 ‘역사 속 삶의 지혜: 사기(史記)를 통해 본 인간상’(8. 22.~11. 21.)을, ▲ 광진정보도서관에서는 ‘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8. 28.~11. 20.)를 운영한다.

충청, 강원권에서는 ▲ 충남대가 대전광역시노은도서관과 협력해 ‘서양 문학에 배우는 삶의 지혜: 인간의 열정과 고뇌’(8. 22.~11. 13.)를, ▲ 강원대가 춘천시립도서관과 협력해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2막을 설계하다’(8. 28.~11. 20.)를 운영한다. 영호남권에서는 ▲ 부산대가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과 협력해 ‘대화와 공감의 지혜: 대중문화의 언어로 소통하기’(8. 28.~11. 20.)를, ▲ 경북대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과 협력해

‘철학적 대화의 지혜: 소크라테스처럼 지혜 사랑하기’(8. 27.~11. 12.)를,
▲ 전남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과 협력해 ‘문학에서 배우는 지혜: 문학적 진실, 역사적 사실’(8. 27.~11. 19.)을 운영한다.

지혜학교는 도서관이라는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고학력 은퇴자들의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인문학 전공 인력의 전문지식의 사회적 활용을 높여, 인문학 프로그램의 수요, 공급, 매개 측면에서 모두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혜학교’를 통해 성찰, 실천, 공생의 지혜를 키워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도서관과 국·공·사립 주요 대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도서관 지혜학교’ 강좌 현황

2. ‘도서관 지혜학교’ 포스터

지역	대학	도서관(기간)	분야	강의 제목
서울	서울대	국립중앙도서관 (8.26~11.18)	자기 삶의 역사 쓰기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 인생 2막을 설계하다 12주 동안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여정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발걸음이 너무 빠르지는 않았는지, 너무 느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역사를 쓰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지혜의 에너지로 나를 다시 채우면서 자기답게 살아갈 행복한 인생 2막을 꿈꾸게 되는 시간이고자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 (8.29~11.28)	대화, 공감, 소통, 치유의 지혜	공존의 지혜 : 닮음과 다름에서 배우기 종교, 문화, 연령, 성, 건강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반려동물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도 부대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달랐지만 다른' 많은 존재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닮음과 다름을 대하는 인간 마음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공존의 지혜를 진지하게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도서관 (8.22~11.21)	역사/철학에서 배우는 지혜	역사 속 삶의 지혜 : 『사기(史記)』를 통해 본 인간상 동아시아의 첫 번째 통사(通史)인 『사기(史記)』의 수많은 인물과 함께 호흡하며, 역사의 의미, 인간관계, 공동체의 삶, 권력과 명예, 경제와 부 등 현대인도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번역본뿐만 아니라 원전도 참고하면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통과 고전을 읽는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 (8.28~11.20)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일찍이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고대 로마는 서양 문명의 근간으로 평가됩니다.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교양 전반에 있어서도 로마인들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지금-여기' 키케로와 세네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로마 사상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이정표로 삼아 함께 읽는 시간은, 로마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삶의 지혜를 얻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산	부산대	부산광역시 금정도서관 (8.28~11.20)	대화, 공감, 소통, 치유의 지혜	대화와 공감의 지혜 : 대중문화의 언어로 소통하기 21세기 소통과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현대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여 아픔을 공유하고 공존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혐오 언어와 증오 범죄 등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자화상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지혜를 다양한 형태의 대중문화 속에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대중매체 속 언어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대	대구광역시립 동부도서관 (8.27~11.12)	역사/철학에서 배우는 지혜	철학적 대화의 지혜 : 소크라테스처럼 '지혜 사랑하기' 소크라테스는 그야말로 철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철학적 방법과 실천은 오늘날에도 철학적 방법론의 전형으로 인정되며, 이것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활용한 세미나를 통해 인간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철학적 문제'를 참가자들이 직접 탐구하고 소통하여 실천적 통찰의 지혜에 다함께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광주	전남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도서관 (8.27~11.19)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문학에서 배우는 지혜 : 문학적 진실, 역사적 사실 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유럽의 역사를 발견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은 많은 사건들을 문학을 통해 재조명해보고,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진실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파악하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전	충남대	대전광역시 노은도서관 (8.22~11.13)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서양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 인간의 열정과 고뇌 인생 후반기 두 번째 성장의 기회를 준비하며 숨겨진 창의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열정적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본 강의는 지혜의 보물창고와 같은 서양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사람의 욕망, 약의 유혹, 신을 향한 열망, 자연으로의 회귀, 삶의 환희, 음악에 대한 집념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나의 열정의 색과 온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강원	강원대	춘천시립도서관 (8.28~11.20)	자기 삶의 역사 쓰기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 인생 2막을 설계하다 12주 동안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여정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발걸음이 너무 빠르지는 않았는지, 너무 느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의 역사를 쓰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지혜의 에너지로 나를 다시 채우면서 자기답게 살아갈 행복한 인생 2막을 꿈꾸게 되는 시간이고자 합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019
도서관

지혜 학교

‘삶을 바꾸는 읽’, 지혜와 함께

2019년 8월 ~ 11월 (12주간)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 법률스님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박식해질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지혜로 현명해질 수는 없다.
- 몽테뉴

지자락 인자수(智者樂 仁者壽):
지혜로운 이는 즐겁게 살고, 어진 이는 오래 산다.
- 공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2막을 설계하다
마포중앙도서관 | 공존의 지혜: 달음과 다름에서 배우기
서울시교육청강남도서관 | 역사 속 삶의 지혜: 『사기(史記)』를 통해 본 인간상
광진정보도서관 | 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부산광역시금정도서관 | 대화와 공감의 지혜: 대중문화의 언어로 소통하기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 철학적 대화의 지혜: 소크라테스처럼 '지혜 사랑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서관 | 문학에서 배우는 지혜: 문학적 진실, 역사적 사실
대전광역시노은도서관 | 서양문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간의 열정과 고뇌
춘천시립도서관 |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인생 2막을 설계하다

교육기간 8월 ~ 11월 (12주)
참가대상 인생의 두 번째 50년을 준비하는 중장년
(2019년은 시범운영으로 도서관별 참가자 모집 완료)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
(070-8633-8140~3 / www.libraryonroad.kr)
서울대 인문학산지원센터
(02-880-6025 / humanities.snu.ac.kr)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 주 요 내 용 》

-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반려동물 및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업자 점검(2주간, '19. 8. 19 ~ 30)

* 점검업종(8종) : (허가) 동물생산업, (등록)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전시업·위탁업·미용업·운송업

- 영업자의 맹견* 소유 여부 및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 및 제도 홍보 병행

* 맹견(5종, 잡종 포함)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④스테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반려동물·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8종) : (허가) 동물생산업,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지자체는 반려동물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특별점검임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는 지자체(특별사법경찰 포함)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권역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경기, 강원·충북, 충남·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점검 사항>

-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
- * (생산업) 75마리/명, (판매·수입업) 50마리/명, (전시·위탁업) 20마리/명

<개별 영업별 중점 점검 사항>

-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
-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장묘·위탁업), 전시동물의 월령(6개월) 기준 준수 및 동물 등록 여부(전시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여부(미용업) 등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함

-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허가(등록) 업체가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참고로, 지난 4.25~5.24까지 실시한 상반기 영업자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 아울러,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의 종류 :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①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②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③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④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고 하며, 금번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 이외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2호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영업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 (행정처분) 영업정지 7일 ~ 1개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환경부,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 수입량이 많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높여 폐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감축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월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 *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 ** 수출입 허가대상(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페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참고 사항>

○ 2018년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 톤이며, 석탄재(127만 톤, 50.0%), 폐배터리(47만 톤, 18.5%), 페타이어(24만 톤, 9.5%), 폐플라스틱(17만 톤,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에는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 수입량 : ' 14년 216만 톤 → ' 16년 234만 톤 → ' 18년 254만 톤
수출량 : ' 14년 27만 톤 → ' 16년 28만 톤 → ' 18년 17만 톤

-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 ① (폐플라스틱)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 유도

② (페타이어)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페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

- 또한, 8월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1. 주요 재활용 폐기물 수입 현황.

2. 중금속 검사 기준. 끝.

①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국가별 수입량					
	합계	일본	-	-		기타
석탄재	합계	일본	-	-		기타
	1,268,226	1,268,226	-	-		-
폐타이어	합계	호주	미국	이탈리아	일본	기타
	240,970	105,931	71,722	47,969	6,923	8,425
폐플라스틱	합계	일본	미국	필리핀	네덜란드	기타
	166,376	66,121	36,446	10,921	9,076	43,812
폐배터리	합계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도미니크 공화국	기타
	469,979	142,686	71,123	68,778	30,151	157,241

1.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용출분석)

(단위 mg/L)

구분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화합물
기준	3	3	1.5	0.005	0.3	1.5	1

2. 용도별 재활용 기준(중금속 함량 관련)

① 석탄재 : 시멘트원료 재활용 기준(함량분석)

(단위 mg/kg)

구분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기준	150	800	50	50	2

② 폐타이어

-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시 재활용 기준(함량분석)

(단위 mg/kg)

구분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염소농도	저위 발열량
기준	200	800	9	13	1.2	무게의 2% 미만	4,500kcal/kg 이상

-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 재활용 기준 :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폐플라스틱

-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시 재활용 기준(함량분석)

(단위 mg/kg)

구분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염소농도	저위 발열량
기준	200	800	9	13	1.2	무게의 2% 미만	4,500kcal/kg 이상

-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 회수 시 재활용 기준 :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산재노동자 재취업 대폭 증가

- 상반기 직업복귀율 전년대비 3.45%p 상승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2018. 1월경 산업재해로 허리를 다친 A씨(64년생)는 치료를 마치고 산재 장애등급 제11급을 판정받고 **건설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서울재활지원팀의 재취업서비스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에 연계되어 2019. 7월 **건물보안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업재해로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 특화서비스를 위하여 **2019.1.9.부터 전국에 8개 광역단위의 재활지원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서비스 제공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127.35%(3,414건 → 7,762건)** 향상 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 현재, 공단은 6개 지역본부와 원주·수원지사 등 8개 권역별 재활지원팀에 취업 전문가를 배치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단 재활지원팀은 **32개 민간 취업전문기관과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업무 협약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등의 연계서비스와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등록, 취업설명회 개최 등 직접 서비스로 대상별 맞춤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산재 장애로 인해 원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 변경이나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산재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 동안 재활지원팀은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직업복귀자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5,297명(26,276명 → 31,573명), 직업복귀율은 3.45%p(61.58% → 65.03%) 증가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이는 산재노동자의 80% 정도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이고 산재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화된 재활지원팀에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인다.

□ 향후 공단은 현재 8개 재활지원팀을 확대 운영하고, 산재노동자 인턴고용제를 통한 사업주 지원 및 산재노동자에게는 취업성공 인센티브 지원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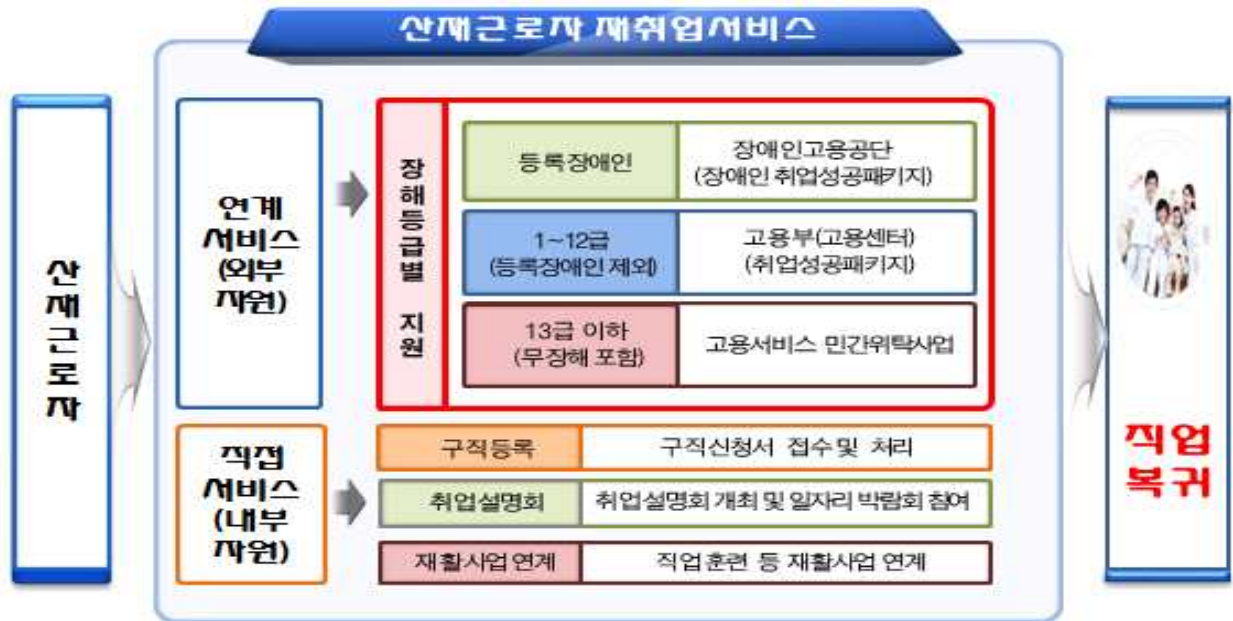
□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재활지원팀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더욱 발전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1 조직 신설

○ '19. 1. 9. 재취업서비스 효율화 목적으로 8개 권역별 재활지원팀* 신설

* 6개(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지역본부, 원주·수원지사 설치

2 산재근로자 재취업 프로세스



3 추진 실적

○ 권역별 재활지원팀 운영 및 업무 집중화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서비스 연계실적 전년 동월 대비 127.35%(3,414건 → 7,762건) 증가

(단위: 건, %)

구분	계	직업 훈련	취업성공 패키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구직 등록	취업 설명회	지역사회 자원연계
'18. 상반기	3,414	927	70	382	1,266	563	206
'19. 상반기	7,762	1,565	215	1,265	2,246	2,129	342
증감률	127.35	68.82	207.14	231.15	77.40	278.15	66.01

4 추진 성과

○(직업복귀율 상승) '19. 6월 현재 직업복귀율 65.03%로 전년 동월 61.58% 대비 3.45%p 상승

○(재취업서비스 재취업률 증가) 재활지원팀의 전문적 재취업 서비스 지원으로 재취업서비스 이용자의 재취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4.20%p ('18. 6월 21.31% → '19. 6월 25.51%) 증가

(단위: 명, %, %p)

구분	요양종결자	직업복귀자	직업복귀율	서비스 이용자 재취업률
'18. 6월	42,666	26,276	61.58	21.31
'19. 6월	48,549	31,573	65.03	25.51
증감	5,883	5,297	3.45	4.20

“유아 발달지연, 휴대전화로 조기 관리한다.”

-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유아의 발달지연은 부모가 쉽게 발견하기 어려워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고, 발견하더라도 치료방법 및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가와 연계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오감' 조 <유아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 -

□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친화적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오감 조의 ‘유아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가 대상에 선정됐다.

○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6월 26일(수)부터 7월 22일 (월)까지 진행되었으며, 54개 조가 참여한 가운데 오감 조를 포함한 총 5개 조가 최종 선발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 최종 수상한 5개 조는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혁신성, 여성가족친화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전문성 및 사업수행 의지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었다.

< 2019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

순위	조이름	사업이름
대상	오감	유아대상 모바일 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
최우수상	스토리앤시스터즈	마음씨(see) 학교
	박피디와황배우	유방암 생존자 토크뱅크
우수상	베토씨앤씨	다문화 아기잠 교육 전문가 양성
	굿임팩트	취약계층 창작예술 문화 아카이브

- 대상을 수상한 ‘오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아이의 발달문제를 조기에 포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 오감 조의 백지연 대표는 7년 동안 아동작업치료사로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부모상담을 해오면서 부모가 유아를 치료기관까지 데려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치료기관 뿐 아니라 부모 양육방식, 보육기관 등의 일상생활이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동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 최우수상은 워크북(익힘책)으로 청소년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검사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스토리앤시스터즈’와 유방암 생존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낸 '박피디와황배우'가 선정되었다.

- 박피디와황배우 조의 황서운 대표는 유방암 수술과 치료를 마친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암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방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이번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우수상은 이주여성 아기잠 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영·유아 수면 자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낸 '베토씨앤씨'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 창작예술품 판매·대여 중개 대행 사업 계획을 낸 '굿임팩트'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시상식은 오는 20일(화)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 '신나는 조합' 교육장(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리며, 수상한 조에게는 소정의 사업개발비와 추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컨설팅)이 제공된다.

- 지난 해 대상을 수상한 위드위터와 우수상을 수상한 퍼플레이컴퍼니, 나나토리 등 3개 조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수상기업에 대한 자문을 지원받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2018.12.)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 ※ ▲ 위드워터 : 사라져가는 대중목욕탕을 장애인들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수중재활운동사로 양성한다는 아이디어로 대상 수상
⇒ 수영장에서 장애인 대상 운동·교육 등 실시 중
- ▲ 퍼플레이컴퍼니 : 영화계 성불평등에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영화 휴대전화 어플리케
이션(프로그램) 운영 및 상영회 개최 등 아이디어로 우수상 수상
⇒ 여성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앱 운영(현재 보수 개발 중)
- ▲ 나나토리 : 55세 이상 여성을 전문상담가로 채용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 상담형
교육 실시 아이디어로 우수상 수상 ⇒ 여성 채용·상담가 양성 중

- 첫 회 공모전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력단절여성들과 같은 고용취약 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낸 (주)테스트웍스가 대상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대학생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주)째깍악어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이견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청년여성들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크다”라며,

-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업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전 시상식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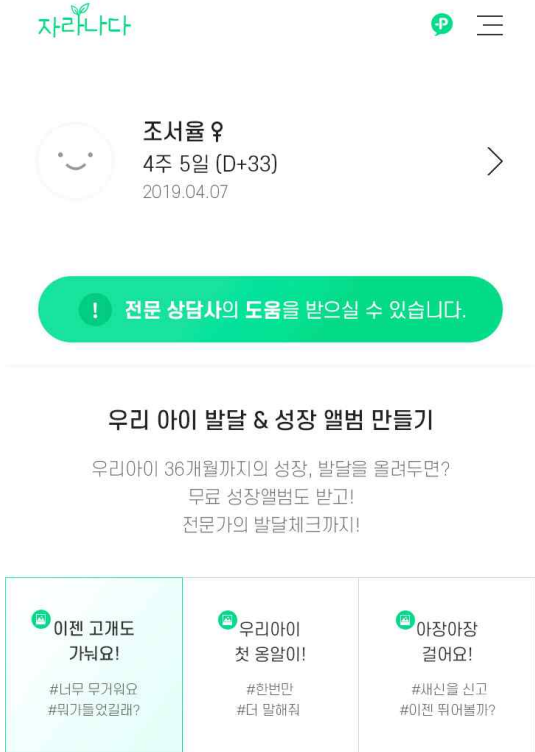
2.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전 수상 내용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전 시상식 계획(안) 및 수상 내용

□ 행사 개요

- 목적 :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기업 시상 및 향후 진행과정 안내
- 일시/장소 : 2019년 8월 20일(화) 14:00~15:00
신나는 조합 교육장(서울 서대문구 소재)
- 참석 대상 : 여성가족부 사업담당자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및 공모전 담당자
수상기업 대표 등 10여명

구분	프로그램	시 간	세부 내용	비고
개 회	개 회	14:00~14:10 (10분)	○ 개회선언 ○ 참석자 상호 소개 ○ 사업 진행과정 안내	
시 상	시상	14:10~14:25 (15분)	○ 예비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 우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시상 ○ 수상자 사진 촬영	<아이디어 공모전> ▪ 대상 (1) ▪ 최우수상 (2) ▪ 우수상 (2) <우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 우수기업 (2)
	인사말	14:25~14:30 (5분)	○ 수상기업 축하인사	▪ 신나는조합 ▪ 여성가족부 사업담당자
	간담회	14:30~14:50 (20분)	○ 기업별 소개 및 향후 계획 공유	
	마무리	14:50~15:00 (10분)	○ 향후 진행과정 안내 및 마무리	

부분	구분	조이름	사업 개요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오감	<유아 대상 모바일전문가 부모조언 서비스> 발달지연을 조기에 포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모바일 무료 자가진단 및 유료 전문가 연계 서비스 제공
			
	최우수상	스토리앤시스터즈	<마음씨(see) 학교> 청소년이 스스로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검사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워크북(익힘책) 제작·보급
			

<마음씨(see) 학교 워크북(익힘책) 예시>

부문	구분	조이름	사업 개요
우수상		박피디와황배우	<유방암 경험자 텔런트뱅크> 유방암 생존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치료 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유방암 경험자 강연 일자리 제공
		 < 유방암 경험자 텔런트뱅크 강연 예시 >	
		베토씨앤씨	<다문화 아기잠 교육전문가 양성> 이주여성 아기잠 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영·유아 수면 자문 상담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아기 수면상담 >	
		굿임팩트	<취약계층 창작예술 문화 아카이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의 창작 예술품 판매·대여 중개 및 창작자 발굴
		 < 취약계층 창작예술 대여·판매 예시 >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에어컨·히터) 추가 지원

- 국토부, 추경예산 12억 원 확보·화물차 1,500대에 장착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 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천 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
-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
- 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11~'18년) 약 96.2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 원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
-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19년도 사업지원을 위한 공모결과, 본예산 18억 원 대비 4배인 74억 원이 신청된 상황에서, 1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을 희망하는 영세 화물차주를 추가 지

원하게 되었다.

-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무시동에어컨의 경우, 공회전 대비 별도의 연료 소비가 없어 100%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무시동히터는 소량의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 98%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국토부는 투자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20년부터는 연료 소모량이 많은 대형차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영세한 화물차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화물차 1500대에 추가로 무시동 에어컨·히터가 장착되면서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 무시동에어컨

- (사업내용) 여름철 화물차량 냉방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소모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배터리를 사용하여 냉방하는 장비



- (시험방법) 설정온도(35°C)에 따른 연료소비율 평가, 기존 디젤엔진 차량 공회전 에어컨작동 대비 무시동에어컨 평가
- (개선효과) 공회전 대비 시간당 연료소모량(1.96 ℓ, △99.9%) 및 온실가스 배출량(4.68kg, △95.4%), 미세먼지(15.5g, △100%) 감소효과(한국교통안전공단, '13)

구 분	공 회 전(a)	무시동에어컨(b)	효과(c=a-b, c=a-b/a)
연료소모량	2,059 (L/h)	0.095 (L/h)	1.964(L/h), △99.9%
온실가스(CO ₂)	4,908 (g/h)	226 (g/h)	4,682(g/h), △95.4%
미세먼지(g/km)	15.471 (g/h)	0 (g/h)	15.471(g/h),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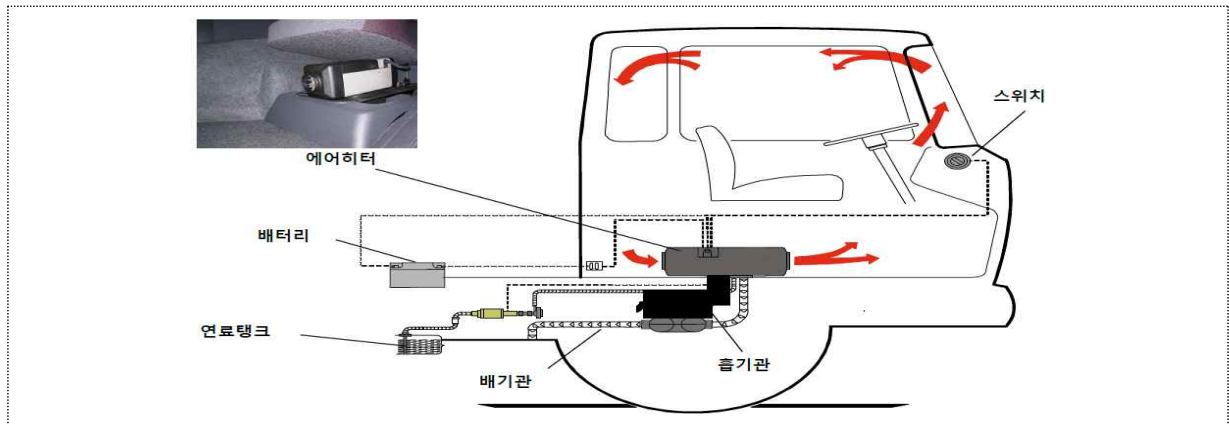
※ 미세먼지: NO_x → PM 환산값 적용

- (경제적 효과) B/C 0.75 (보조금 기준 B/C 1.87)
 - 장착비용/보조금 : 2,500,000원/1,000,000원
 - 연료절감: 1,470 L × 1,272.42원 = 1,870,457원(연간)
 - * 연간 연료절감량 1,470 L = 6시간/일, 125일 적용[(2.059L/h × 6h × 125day) - (0.095L/h × 6h × 125day)]

□ 무시동히터

- (사업내용)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를 위해 시동을 건채 난방을 함에 따라 공회전으로 인한 연비소모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화물차의 시동 없이 소량의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장치



- (시험방법) 설정온도(-5°C)에 따른 연료소비율 평가, 기존 디젤엔진 차량 공회전 히터작동 대비 무시동히터 평가
- (개선효과) 공회전 대비 시간당 연료소모량(1.3ℓ, △85%) 및 온실가스 배출량(3.1kg, △82%), 미세먼지(19g, △98.6%) 감소효과(한국교통안전공단, '13)

구 분	공회전(a)	무시동히터(b)	효과(c=a-b, c=a-b/a)
연료소모량	1.561 (L/h)	0.241 (L/h)	1.320(L/h), △85%
온실가스(CO ₂)	3,800 (g/h)	681 (g/h)	3,119(g/h), △82%
미세먼지(g/km)	20.237 (g/h)	0.274 (g/h)	19.963(g/h), △98.6%

※ 미세먼지: NOx → PM 환산값 적용

- (경제적 효과) B/C 1.21 (보조금 기준 B/C 3.15)
 - 장착비용/보조금 : 1,045,000원/400,000원
 - 연료절감: 990 L × 1,272.42원 = 1,259,696원(연간)
 - * 연간 연료절감량 990 L = 6시간/일, 125일 적용[(1.561L/h × 6h × 125day) - (0.241L/h × 6h × 125day)]

□ 미세먼지 저감 효과

구분	지원대수 (대)	지원금액 (억원)	미세먼지		사회적 비용 (억원)
			원단위 (kg/대/년)	감축량 (kg)	
무시동 에어컨	1,000	10	11.6	11,600	19.8
무시동 히터	500	2	15.0	7,500	12.8
계	1,500	12	-	19,100	32.6

* (무시동 히터) $19.963(\text{g/h}) \times 6(\text{h/일}) \times 125(\text{일/년}) = 15.0(\text{kg/대/년})$

** (무시동 에어컨) $15.471(\text{g/h}) \times 6(\text{h/일}) \times 125(\text{일/년}) = 11.6(\text{kg/대/년})$

*** KAIST(1998) 5대 대기오염물질의 단위당 환경비용 산출자료 활용시 미세먼지(PM) 1kg당 171,528원 사회적 비용 발생

□ 유류사용량 감축 효과

구분	지원대수 (대)	지원금액 (억원)	유 류		유류절감 비용 (억원)
			원단위** (L/대/년)	감축량 (L)	
무시동 에어컨	1,000	10	1,470	1,470,000	39.6
무시동 히터	500	2	990	495,000	6.4
계	1,500	12	-	1,965,000	46.0

* '19.1.1.기준 오피넷 경유 1L당 단가 1,272.42원

※ 1대 당 연간 감축효과 분석(원단위)

(단위 : L, tCO₂-eq/대, kg)

구분	연비 저감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저감량	저감비율	저감량	저감비율	저감량	저감비율
무시동 에어컨	1,470L/대	△99.9%	3.8톤/대	△95.4%	11.6kg/대	△100.0%
무시동 히터	990L/대	△85%	2.5톤/대	△82%	15.0kg/대	△98.6%

* 경유 1L ≍ 온실가스 2.6kg CO₂, CH₄, N₂O 고려시
연간 연료절감량 = 6시간/일, 125일 적용

□ **지원 실적** : 8년간('11~'18년) 약 96.2억원 지원

- 온실가스 감축장비 지원 : 72.5억원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 온실가스 측정관리장비 지원 : 20.8억원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등)
- 온실가스 감축 효과검증 지원 : 2.9억원 (무시동히터 효과검증 등)

□ **사업효과** : 온실가스 12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원 절감 (한국교통안전공단 산출)

【 사업지원 및 사업효과 】

구 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억원)	유류비 절감량 (kl)	온실가스 감축량 (톤CO ₂ -eq)	미세먼지 감축량 (kg)	물류비 절감 (백만원)
온실가스 감축장비 지원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16개 사업지원	72.5	33,962	87,596	215,434	50,646
온실가스 측정 관리장비 지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보급	20.8	-	-	-	-
온실가스감축 효과검증 지원	보유한 장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여부 검증	2.9	-	-	-	-
합 계		96.2	33,962	87,596	215,434	50,646

* 물류비 산출방법: 장비별 연간 연료절감가능량 × 지원차량대수 × 유류비

** 물류비 절감액은 '12~'18년 연도별 경유 평균가격 적용(누적, 오피넷)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 강화한다

- 해수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표준조례안 마련·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한다.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 4. 18.)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까지 지역별 해양공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 (∼2017) 경기만→(2018) 부산·경남→(20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0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도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협의회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은 협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논의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진행,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시 전문기관 활용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권한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서 이번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하였다.

노진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더욱 체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시·도지사의 책무)

제2장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제3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의견청취 등)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비밀 준수)

제13조(간사)

제14조(회의록)

제15조(수당 등)

제16조(운영세칙)

제3장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17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제19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견청취 등)

제21조(회의)

제22조(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제23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제24조(참관인)

제25조(비밀 준수)

제26조(회의록)

제27조(지역위원회의 준용)

부 칙